



베네수엘라

反차베스 시위 확산으로 정국불안 고조

지난 4월 차베스 대통령의 복귀 이후 소강 국면을 보이던 베네수엘라 정국이 노조 및 경영자 단체의 총파업 선언으로 재차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진퇴를 둘러싼 親정부측과 야당세력간의 대치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4월에 이어 군부의 재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초 국제유가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는 정치불안이 계속되면서 침체로 돌아섰고, 이는 다시 정국불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세수기반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지기반 확보를 위한 차베스 정권의 선심성 정책이 지속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되었고, 이는 동국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 및 경영자 단체의 총파업 선언

10월 11일 베네수엘라 최대 노조단체인 노동자연맹과 민주협의회, 상공인연합회, 국영석유회사(PDVSA) 등은 차베스 대통령이 12월 중 재신임 투표 실시를 약속하지 않으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 동안 反차베스 진영은 매일 11일¹⁾을 반정부 시위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기대를 걸었던 차베스 탄핵을 위한 일련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총파업을 결의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차베스 측은 중도사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면서 재신임 투표 실시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다. 또한 쿠데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도 카라카스

1) 2002년 4월 11일 차베스 지지세력과 반대세력간에 대규모 유혈충돌이 발생, 수백 명이 사망하고 이 과정에서 차베스 대통령이 축출되었다가, 친위 쿠데타로 권좌에 복귀한 바 있음.

일대의 대통령궁, 국영 방송국 등 8개 장소에 안전지대를 설치하고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였다.

차베스는 친위 쿠데타에 의한 권좌 복귀 이후 표면적으로는 '4월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하여 재계, 노동계, 종교계 등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려는 제스처를 보여 왔으나, 오랜 정치적 불신으로 인한 재야 세력의 비협조, 집권당 경제팀내 불협화음 노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세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선심성 지출정책을 계속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의식한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의 악화가 동국의 가장 주요한 경제현안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정국불안에 따른 경제침체 지속

베네수엘라 정부는 재정수지 개선을 위하여 2002년 5월 노브레가 장관의 취임을 계기로 세계개혁안과 이자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新경제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가세 및 은행거래세 세율변경²⁾에 따른 정부의 세수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위축으로 전반적인 세수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해온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공사(PDVSA)도 방만한 경영과 OPEC의 생산량 제한조치로 재정수입에의 기여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선심성 재정지출 증가와 교사들의 체불임금 지급³⁾을 위해서는 조세항목의 추가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경제팀내 이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조세항목의 도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02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폭은 2001년 3.5%에서 4.3%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민간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수지 개선대책이 없으면 재정수지 적자폭이 GDP 대비 6%까지 확대되어 베네수엘라 경제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내수 및 투자 위주로 성장해 온 베네수엘라 경제는 재정수지 적자 확대와 함께 정국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내수가 침체에 빠지면서 기업 파산의 증가, 실업 급증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非석유부문 수출 감소까지 겹쳐 경제성장률은 2001년 2.7%에서 2002년 -4.0%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볼리바르貨의 대미달러 환율도 9월 30일 현재 1달러당 1,460으로 금년 2월 자유변동환율제가 도입된 이후 98% 이상 급등하는 등 경제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차베스에 대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빈발과 이에 따른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주

2) 신경제대책 발표 이후 부가세는 기존의 14.5%에서 16%로 은행거래세는 0.75%에서 1%로 각각 세율이 변경되었음.

3) 베네수엘라의 2002년도 예산에는 지방정부에 대한 채무, 교사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불가상승에 따른 연금 증액분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 이들 미계상비용(hidden expenditures)은 GDP의 1.5%에 달하며, 관련자들의 청구에 직면해 있음.

요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프리스가 4월 9일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B2에서 B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최근 S&P도 등급을 종전의 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들어 Fitch, IBCA를 포함해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 베네수엘라에 대한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다. S&P는 금번 하향 조정의 사유로 국내 정치·사회 불안 양상 심화, 정부의 개혁성과 미비, 석유수출 수입(收入)에의 지나친 의존도, 상반기 경제 지표 등이 저조하며 계속저가인 저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추가적인

신용도 하향 조정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향후 국가신용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국안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답자의 51%가 추가 쿠데타 발생을 예상하고 있으며 쿠데타가 개저오르 반저하 경우 응답자의 25%가 내전에 참여(13%는 반대세력을 위해, 12%는 정부를 위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간내 국가신용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예정된 총과업으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裋祥旭】